

사회적 경제 활용·재난재해시스템 구축 포함해 서울시, 상호호혜적 대북 인도적 활동 추진해야

서울시 대북 인도적 활동의 목적은 남북주민 등 전 인류 복지 실현

인권은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도덕적 권리이다. 국제사회는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특정 국가의 참담한 상황에 인도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은 인권보호원칙에 기반을 둔 인류 전체의 복지 실현으로부터 확보된다. 따라서 서울시의 대북 인도적 활동은 남북 주민을 포함한 인류 전체의 복지 실현과 관련된다.

서울시 대북 인도적 활동은 통일환경·한반도 평화환경 조성에 이바지

서울시의 대북 인도적 활동은 국가, 민족, 인종,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을 넘어서는 인류애의 문제이다. 더군다나 북한은 같은 민족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해 공존해야 할 대상이다. 평화와 통일은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 시민 등 한반도의 모든 행위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이다. 서울시 대북 인도적 활동은 통일 환경 조성 and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에 많은 이바지를 할 것이다.

서울시 대북 인도적 활동은 퍼주기가 아니라 평화·통일 위한 나누기

우리가 풍족하여 넘쳐서 남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인도주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남한은 북한보다 약 40배 높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매우 안정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민족인 북한주민은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기아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남한 경제 규모에 비춰보면 그동안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매우 작은 수준이다. 2018년

남한의 대북지원은 총 77억 원으로 국민총소득(GNI) 1,898조 원의 0.004%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남한에서 한 해 버려지고 있는 음식물폐기물은 450만~500만 톤이고 처리비용은 연간 20조 원에 이른다. 대북 퍼주기 논란은 무의미한 소모적인 정치 이념적 갈등 조장에 불과하며 오히려 대북지원 규모를 늘려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대북 인도적 활동은 강자가 약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 대북 인도적 활동은 보편적 가치인 인간 존엄성을 유지·보호하며 더불어 살기 위한 행동이다. 한반도에서 더불어 산다는 것은 곧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다.

대북 인도적 활동은 대북제재와 무관… 서울시, 사업 적극 전개해야

북한 핵문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대부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 때문에 북한의 참담한 인도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인도주의 단체의 대북지원 활동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대북 인도적 활동은 대북제재 사항이 아니다. 기존 대북제재 결의안들은 인도주의적 면제 항목을 명시하고 있고, 2018년 8월 6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면제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UN(국제연합) 대북제재위원회는 2019년 초 기준으로 총 22건의 대북 인도적 사업 관련 제재 면제 승인을 했다. 나아가 UN은 2019년 3월 오히려 강도 높은 대북제재가 대북 인도적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다. 이처럼 대북제재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대북 인도적 활동의 장애물이 아니다. 따라서 수도로서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대북 인도적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대북 인도적 활동은 남북관계 개선 등 다양한 기대효과 발생

서울시 대북 인도적 활동은 인류애적 차원을 넘어 한반도 평화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서울시 대북 인도적 활동은 남북관계 개선 및 지속가능성 확보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일방적 지원이 아닌 협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 대북 인도적 활동은 상호 경제적 이익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 대북 인도적 활동은 SDGs 등 국제사회의 규범 실천 및 확산에 이바지할 것이다.

서울시 대북 인도적 활동은 빈곤, 전염병, 환경, 인권 등 남북한 비전통 안보협력의 토대로 작용할 것이다. 안정적인 남북관계는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다. 그러한 점에서

서울시 대북 인도적 활동은 북한주민의 긍정적 대남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는 남북한 상호 신뢰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서울시 대북 인도적 활동은 북한에 대한 서울 시민 또는 남한주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통일·평화 문제의 공공성을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이는 지자체의 역할을 증대시켜 분권형 대북정책에 기여할 것이다.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로서 분권형 대북정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식량난·경제난 등으로 인도주의적 상황 심각… 외부 도움 절실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많은 수의 북한주민이 영양부족 상태에 있다. 2018년 세계기아지수에 따르면 북한의 기아 순위는 119개 국가 중 109위를 차지한다. 북한의 식량불안은 만성적 영양부족 상태를 초래하며 이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북제재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제약은 북한의 식량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북한주민의 심각한 인도적 상황은 열악한 자연환경에도 그 원인이 있다. 그동안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은 북한의 자연환경을 파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더욱더 경제개발에 집중했다. 그러나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적절한 재해재난대응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사실상의 인재(人災)로 반복된 자연재해의 원인이 되었다. 경제난과 반복된 자연재해, 식량난은 북한의 심각한 보건의료(위생) 상황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북한의 열악한 상하수도 시설과 토양 오염에 따른 수질 오염은 전염성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결핵 발병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다제내성 결핵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처럼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은 총체적으로 심각하여 외부의 도움이 매우 필요하다.

대북 인도적 활동 방향은 인도적 지원·협력, 개발 지원·협력의 결합

대북 인도적 활동의 쿼드러플 넥서스(Quadruple Nexus)란 인도적 지원, 인도적 협력, 개발지원, 개발협력이라는 4개의 영역과 축이 상호 결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이 대북 인도적 활동의 중심축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 4개의 영역이 선형적이라던가 단계적인 순서를 갖는 것은 아니다. 사안과 시급성에 따라 동시적 또는 개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그 형태도 다양하고 복합적일 수 있다.

서울시, 독자적·다자협력적 차원 구분해 대북 인도적 활동 추진 필요

제주도 감귤보내기 사업과 경상남도의 통일딸기 사업은 대북 인도적 활동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다. 이처럼 성공적인 대북 인도적 활동은 상호 호혜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북한의 필요와 서울시민의 필요에 부합하는 대북 인도적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상호 이익에 기반을 둔 대북 인도적 활동은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서울시 대북 인도적 활동은 독자적 차원과 다자협력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자적 차원은 국제기구나 국내외 대북 민간단체를 활용하거나 북한의 대남 사업 기관과 직접 협력하는 방안이다. 다자협력 방안은 대북 인도적 활동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거버넌스는 중앙정부 및 다른 지자체, 국내외 시민단체, 그리고 국제기구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상호 호혜성을 고려할 때 식량 다양성을 위한 에너지 바 지원, 방한 용품 및 보건위생 용품 지원, 이산가족 화상상봉 시스템 및 재해재난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북 인도적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는 서울시 취약계층에도 도움이 되며, 나아가 대북 인도적 활동 플랫폼 구축의 토대로 작용할 것이다.

